

우리 학계에서 논문 출판의 진실성을 제고하려면



글 강호정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과편협 출판윤리위원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 학문 활동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윤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개선될 수 있을까? 강호정 교수의 글은 연구윤리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때의 일이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뿐 아니라, 선생님들이 절대 촌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잘 보살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뭔가 하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결국 학년이 마쳐갈 무렵 마지막 면담 시간에 내가 번역한 책 중 선생님께 도움이 될 만하다 생각되는 것을 하나 골라 가져다 드렸다. 비싼 물건이 아니고 현금도 아니며, 더욱이 성적 평가가 이미 끝난 학기말이었기 때문에 아무 대가성 없이 하는 선물이라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 '사후매수죄'라는 기이한 법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담임 선생님은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다는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보내셨다.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도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마

도 이 선생님께서 책을 받으셨다면, 나는 다음 해에는 다른 선생님께 문화상품권이라도 드리려고 했을 것이고, 이것은 곧 백화점 상품권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현금으로 발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이후 애를 통해서 그 초등학교의 선물에 대한 규칙을 자세히 듣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고 또 아이들도 이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선물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만이 허락되었다.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이나 선생님 생신 날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 문집, 아이들이 만든 꽃과 같은 것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작은 화분이나 꽃다발조차 허락되지 않는 제도였다.

오래전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최근 우리 과학계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의 문제 때문이다. 사실 논문표절이나 저작권 (authorship) 문제, 그리고 자료의 조작에 이르기까지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 문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학계의 자정 노력보다는 정치권으로 문제가 비약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다. 황우석 박사나 신정아 씨와 같은 유명 인사뿐 아니라, 김병준 교수, 정운찬 교수 등 학자 출신 관료들의 문제를 거쳐 최근에는 문대성 의원과 같은 운동선수에게까지 이런 문제들이 확대되었다. 한때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사회에서는 논문 작성의 윤리 문제로 인해 꽤 시끄러

운데도, 놀랍게도 학계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아직도 윤리 문제보다는 논문 수 많이 채우는 게 학교 이름 날리고 등수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일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 수준을 만족시키려면 늦었지만 학계, 특히 과학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동시에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해 근대적인 과학이 뒤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안한다면 이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미 논의가 많이 진행된 것에 덧붙여서 필자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모든 이공계 대학, 그리고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는 <과학 글쓰기>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현재 대학들의 '교양' 교육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연구자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래서 강의자조차 큰 열정이 없는 '작문' 교과목들을 대충 운영하거나, 대학원생들을 쥐어짜 소위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한 편이라도 더 발표하려는 교수들의 욕심으로 <영어논문 쓰는 법> 특강들이 글쓰기의 대부분을 이룬다. 이공계 연구동향과 실험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의 글쓰기 교육은 자연스럽게 '실천 가능한' 연구윤리 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멋진 레토릭의 '융합' 교육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과학 글쓰기' 교육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어느 윤리 문제가 그러하듯이 논문작성에서 생기는 윤리 문제는 작은 것에 출발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향이 있다. 실험실에서 실험하다 작은 실수를 덮어놓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실험결과 전체를 조작하기도 하고, 참고문헌 한두 개 잘못 기입하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논문 전체를 베껴 쓰기도 한다. 앞의 초등학교에서의 예에서 보듯 학부 실험리포트, 비공식적인 문서와 같이 작아 보이는 것에 대한 것부터 엄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상당수 대학들이 이미 규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강화 확대하여 보고서와 과제물의 표절이나 자료 조작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와 같은 정도로 다루어야 한다.

셋째,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제도를 고치는 것에서 출발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사가 심한 사람은 술자리를 피하면 되고, 아침 잠이 많아 지각하는 사람은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면 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문관련 윤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은, 많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원’, 혹은 ‘전문과 과정’과 같은 것이다. 또 굳이 단과대학을 들먹이자면 ‘의과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과 같이 기초적인 학문보다는 응용이나 다른 활동이 더 중요한 곳이 약한 고리이다. 이런 곳들은 굳이 ‘박사학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원이 아니다. 물론 기초적인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전통적인 의미의 논문에 근거한 학위를 수여해야겠지만, 단순히 학위 이력이

필요한 것이라면 논문 대신에 충분한 강의 수강이나 시험 혹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주어지는 전문학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인센티브’다. 최근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내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갑자기 과학자들이 푹푹해져서가 아니라 논문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논문 발표를 연구비 지원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는 시스템, 대학 등수 매기기에서 논문수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시스템 변화에 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연구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양’의 인센티브를 주기란 힘들다. 그렇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의 인센티브를 주기는 쉽다. 바로 처벌이다. 판단이 애매한 자기표절이나 경미한 윤리 위반은 큰 문제로 다루어지는 반면, 남의 논문을 통째로 베껴서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한 명예교수님의 소식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알려져도 ‘명예’라는 타이틀이 박탈당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또, 제자의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교수가 우리나라 대표 학회의 학회장을 하는 모습을 수차례나 목격했다. 음주운전 후에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신호위반의 운전자는 어떤 벌칙에도 수궁하지 않을 것이다.

추석 무렵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예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나에게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취해왔다. 잘못

된 언론보도에 화가 났었는데 대신 얘기해줘서 시원했다는 젊은 과학자들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논문윤리 문제는 과거에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자는 징벌적 논의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논문 윤리에 대한 교육, 토론, 그리고 제도의 개혁이 앞으로 연구를 수행할 젊은 과학자들의 더 큰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